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총장선출제 필요, 소통 중요하지만 방법론 고민해봐야

(차기 총장)

▶1면에서 이어짐

현행 총장선출제, 민주주의 시대 정신 반영해야

▶사회 : 현행 총장선출제에도 대한 평가는?

이성근 : 우리학교 총장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가 상당히 부족했으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민주적인 변곡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변화된 총장선출제는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구성원 대의의 뜻이 한 방향으로 향해가야 결국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현 : 직원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선출제를 바꾸겠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우리학교 설립 이후로 있었던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이 학교를 단기간 내에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존중한다. 그러나 최근 자율운영 시행 등 정책에 구성원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을 제1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도 시대적인 요청 사항이라고 본다며, 예전처럼 법인 이사회가 단독 또는 독점적으로 총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현재 학교를 움직이는 모든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윤단비 : 기본적으로 대학과 구성원은 헌법에 따라서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권을 가지고 총장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까지 국가직 차원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선출방법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도 어떤 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김효형 : 총장께서 펼치는 정책과 행보에 학내 구성원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희완 : 현재 구성원들은 총장선출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대학네트워크가 총장선출 모델의 변화를 외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구성원 모두 참여해 총장선출제도 도출해야

▶사회 : 오늘(3일) 대학평의회에서 교수의 회가 제안한 총장선출제 대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해당 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이성근 :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총장선출제가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각 구성원의 의견을 총괄하는 큰 포맷을 만들었다. 구성원 의견 수렴과 충분한 소통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 모델의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제시된 안을 가지고 법인이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있다. 앞으로도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법인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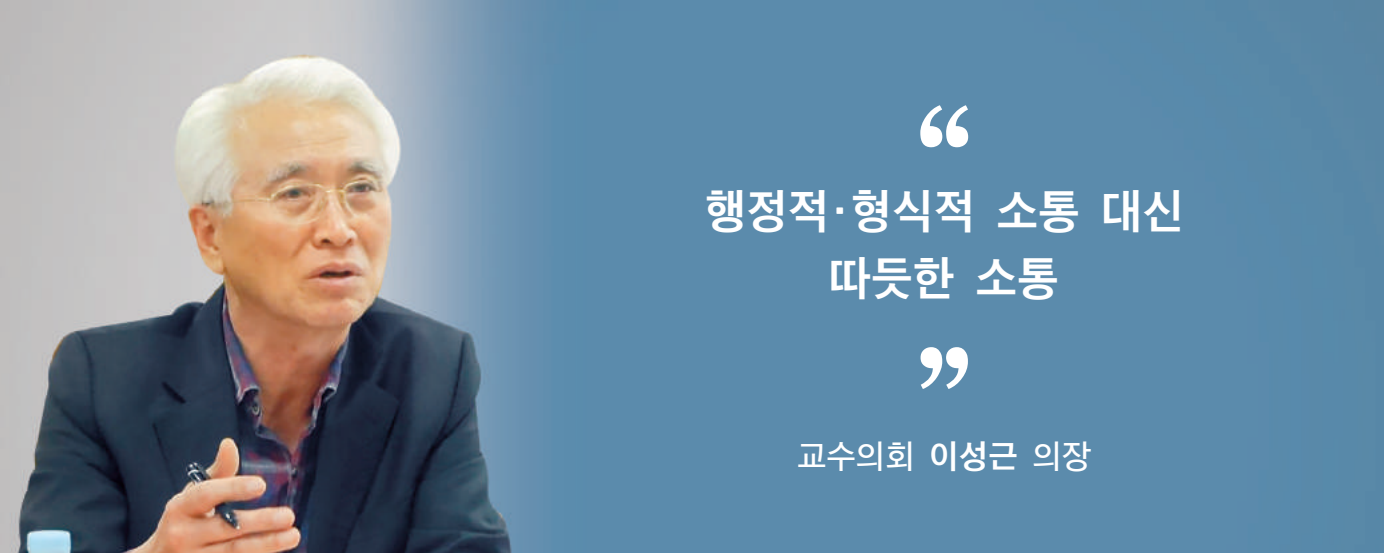
김종현 : 대안에 대해 각 구성원 대표가 불만전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속의 민주주의 형태의 토론과 합의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론화가 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번 안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각 구성원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생각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 총장선출제와 관련한 그간의 이슈를 살펴보면 이전 학생대표들이 학생개발이 사나 정책투표 등 학생의 직접 참여 방법에 관해 많이 고민하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각 학생대표들은 총장선출에 구성원 관심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윤단비 : 김종현 위원장의 발언과 같이,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학생은 학교 내부의 시스템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장선출제도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왜 바뀌어야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총장선출제와 관련한 구성원의 문제의식이 아직은 많이 부재한 상황이다. 공론화를 위해서 구성원끼리 서로가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에 관해 추가로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효형 : 가장 먼저 어떤 이슈가 학생에게 꾸준히 노출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공론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걸론 도출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희완 : 지금까지 총장선출제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관심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총장선



“행정·형식적 소통 대신 따뜻한 소통”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



“학교에 대한 만족감 고치가 가장 중요”
서울C 일반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윤단비 위원장



“학생과 총장도 창구 통해 직접 소통 해야 할 것”
국제C 총학생회 김효형 회장



“총장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어야”
서울C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희완 위원장

출해 학생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한양대처럼 학생이 배제한 총장선출제에 비판적인 학생 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윤단비 : 총장선출제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단 하나로 귀결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사회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에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만큼, 여러 의견 속에서도 좀 더 적합하고 이치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주제

성과 자율성이란 구성원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막연한 관심보다 이러한 의식들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김효형 : 현재 총장선출제 논의의 기저가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모든 학내 구성원이 참여해야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총장선출제가 되려면 학생을 배제한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기 총장에게 바란다

▶사회 : 학생 사회에서 다음 총장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는가?

이희완 : 좀 더 학생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총장이 좋겠다. 예를 들어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귀 기울여 주고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

김효형 : 학생 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따라서 총장과 학생이 직접적인 창구나 협의체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단비 : 구성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으면 한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에너지의 원동력과 시너지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자긍심에도 긍정적인 바

람을 일으킬 것이다.



김종현 : 각 구성원이 생각하는 투표 비율의 공정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꼭 투표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총장 추천 과정을 완전히 개방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직선제와 간선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염두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좁혀지면 총추위에서 정책 토론을 하거나 심사를 하는 등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성근 : 총장선출제 이슈와 관련한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을 비롯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총추위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종현 : 노동조합은 누군가를 옹립하기 위해 총장선출제를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자는 없다. 또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우리가 바라는 총장상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충분히 공개된다면 나머지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사회 : 후보는 교내 교수 또는 교직원으로 한정될 것인가? 아니면 재단 또는 그 외의 인물도 후보로 받아들이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성근 : 학교 외부 후보자는 당연히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총장 후보자의 소속이 어디가 되었든 프로필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이지만 다른 부분은 미리 예단해서 언

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종현 : 교내 제직 중인 교원이 차기 총장이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후보를 그렇게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밖에서도 명망 있는 분들이 후보로 추천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과 더불어 이런 논란을 돌파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반드시 투표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종현 : 각 구성원이 생각하는 투표 비율의 공정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꼭 투표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총장 추천 과정을 완전히 개방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직선제와 간선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종현 : 여러 학내 단체들이 총장선출제와 관련한 소식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대학주보 기사는 대체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성근 : 총장선출제 이슈와 관련한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을 비롯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총추위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종현 : 노동조합은 누군가를 옹립하기 위해 총장선출제를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자는 없다. 또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우리가 바라는 총장상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충분히 공개된다면 나머지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사회 : 후보는 교내 교수 또는 교직원으로 한정될 것인가? 아니면 재단 또는 그 외의 인물도 후보로 받아들이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성근 : 학교 외부 후보자는 당연히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총장 후보자의 소속이 어디가 되었든 프로필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이지만 다른 부분은 미리 예단해서 언

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종현 : 교내 제직 중인 교원이 차기 총장이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후보를 그렇게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밖에서도 명망 있는 분들이 후보로 추천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과 더불어 이런 논란을 돌파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반드시 투표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총장선출제 만장일치 합의, 지난 10년에서 의미 찾아

박지영 기자 kitty298@khu.ac.kr

지난 3일 열린 대학평의회에서 의원들은 ‘총장선출제 연구특위’가 만든 총장선출제 모델을 이견 없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번 의결은 처음으로 구성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생각과 공감대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법인에 이번 모델을 제출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평의회 총장선출제 모델의 핵심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설치다.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법인으로 총추위를 구성하고 총추위는 심사를 통해 3~5인의 총장 후보를 추천한다. 후보를 대상으로 구성원 투표를 진행해 득표 상위 2인 중 1인을 법인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총장선출제 모델 이전부터 바꾸고자

총장선출제도를 바꾸고자 했던 움직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11월, 제11대 조정형 총장이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하락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한 이후, 제12대 총장에 김병목(법대) 교수가 임명됐다. 당시 법인 이사회 회의를 거쳐 임명된 김 총장에 교수 신입 투표 절차를 거친 전례가 있다. 교수 신입 투표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교수를 제외한 다른 학내 구성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규정 없이 형식상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제11대 총장의 자진사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채택한 제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총장선출 방식은 아니었다.

2006년, 제13대 총장 임명 당시에는 교수와 직원의 신입투표가 진행됐다. 교수만 대상으로 했던 지난 신입 투표에서 직원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교수 신입 투표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학내 구성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구성원 사이에서 입장이 갈리는 양상도

있었다. 2006년 당시 학생과 총민주동문화는 총장직선제를 요구했지만, 직원노조는 “단계적으로 총장 임명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며 “신입 투표권 행사 첫 단계”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인 또한 구성원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다. 당시 법인은 “이사회 전체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어렵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결국 제13대 조인원 총장은 예년보다 늦은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임명될 수 있었다. 임명 이후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신입 투표를 자체적으로 진행했지만, 법인은 “구성원의 의견 도출과정일 뿐, 신입 투표 결과에 따라 임명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질적으로 법인과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었던 것이다.

총장선출제에도 대한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생겨나고 부딪히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다 2014년, 변곡점이 찾아왔다. 당시 법인이사회 일반이사 후보 2명에 대한 선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개교 이후 처음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고려되던 가운데, 이사회에 총장선출을 맡길 수 없다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교수의회가 대학평의

회와 의원 구성 비율을 지적하며 규율이 오히려 시작했다. 교수의회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개지게 되었으며, 학생 대표는 총장선출제 개진 대신 법인 이사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개발이사’를 요구했다. 결국 총장선출제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별위원회 연구를 통해 구성원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총장선출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합의했으며, 2년 뒤인 2016년 총장선출제 모델을 법인에 제출했다. 이 모델은 지난 3월 대학평의회가 합의한 대안의 모태가 됐다.

구성원 참여 방향 논의 과정 지켜 봐야

최근 십여 년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엔 구성원 합의를 통해 하나의 안이 도출됐다. 이는 큰 의미를 가진다. 구성원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자 총장선출제 변화에 대해 그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던 법인의 태도

또한 변했다. 법인은 최근 대학평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대학평의회 연구특위에서 법인에 제안한 총장선출제 안을 계기로 선출제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4월 말 결산 이사회에서는 선출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2016년 대학평의회에서 법인과 총장실이 각각 보인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만 중점을 두고 있다”, “총장제 보고 드러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발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자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한 소위원회들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지만, 법인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다만 “8월 이사회에 맞춰 기각을 잡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총장직선제 요구하는 학생들, “참정권 확보 과정은 민주주의의 역사”

최영규 기자 gyumyeong@khu.ac.kr

“이제는 대학 운영주체가 교수뿐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진다.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대대의 2018년 활동 목표는 ‘총장선출의 학생 참여 확대’이다. 올해 3월까지 전대대 준비위원회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준(교리대) 씨를 만나 총장직선제의 의의를 살펴봤다.

이승준 씨는 “총장 선출에 학생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이 학생을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선거권은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기본 권리라는 이 씨는 “학생이 총장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은 대학이 학생을 구성원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인식을 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정권이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음을 근거로 총장직선제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참정권이 없었던 과거와, 그 이전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땀 그 것이 당연한 사회의 흐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총장 선출제를 둘러싼 대학의 상황을 여성 참정권과 비유할 수 있다.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대대의 2018년 활동 목표는 ‘총장선출의 학생 참여 확대’이다. 올해 3월까지 전대대 준비위원회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준(교리대) 씨를 만나 총장직선제의 의의를 살펴봤다.

이승준 씨는 “총장 선출에 학생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이 학생을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선거권은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기본 권리라는 이 씨는 “학생이 총장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은 대학이 학생을 구성원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인식을 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는 “총장직선제는 결국 대학 스스로가 기득권을 놓아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렇기에 결국 총장직선제 실현은 학생들의 몫이다”라며 “총장직선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모일 때 대학은 더 이상 학생을 피교육자만으로서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변화를 한 번에 이뤄낼 순 없겠지만 오늘로 총장직선제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언젠가 절기가 왔을 때 이를 꼭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멋대로 전횡을 일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이 씨는 또한 “학생이 총장 선출에 참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대학 운영과 정책이 학생을 위하도록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공약은 유권자에게 맞춰져 있다”며 “학생들이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애초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학생들이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구성원 중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생 모두에게 총장 투



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대학은 학생 대표자만 총장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간선제가 유지될수록 학생들의 관심이 대외로부터 무관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선제가 채택된다면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을 교원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며 “대학 별로 지향점을 달리 가져갈 수 있지만 학생 참여 비율을 최소 20%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권이 없다면 대학의 정보는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자연히 학생들은 학사, 행정, 생활 등 대학 운영 전반에서 멀어질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학생도 한 번쯤 들어다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 씨는 학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방선거보다 총장선거에서 대학생의 삶에 더 큰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학교육의 당사자로 학생은 후보자가 되고 나온 다양한 공약을 충분히 판단해 우리